한 "미디어·비정규직법 직권 상정해 달라" 민주 "국민이 원치 않아"

여야 입장차 평행선… 충돌 위기

김형오 "여야 합의된 사안만 처리"

14일 오후 고흥길 국회 문방위원장 등 한나라당 문방위원들이 문방위를 막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일단 문방위를 열고 보자"며 설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나라당이 6월 임시국회 최대 쟁점인 미디어 관련법 및 비정규직법 처리와 관련,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공식 요청하고 민주당이 결사저지 입장을 천명함에 따라 여야의 충돌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14일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한나라당 원내대표단을 이끌고 국회의장실을 방문, "이런 상황에서 미디어법이나 비정규직법 등이 제대로 상임위를 통과할 가능성이 없다"며 "의장의 직권상정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안상수 원내대표는 김형오 국회의장과의 면담에서 "워낙 당 대 당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상임위 자체가 운영되지 않는다"며 "더구나 국회 환경노동위는 열리지도 않고 비정규직법에 대해 논의조차 안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회의장이 힘들겠지만, 지금 미디어법의 상임위 통과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 같고 비정규직법에 대해서도 지금 환노위가 일절 열리지 않고 있다는 점을 국회의장이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직권상정 결사 저지를 선언, 여야의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국회의장을 방문한 직후 원내대표단을 이끌고 김형오 국회의장을 항의 방문, 절대 직권상정을 하면 안 된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김형오 국회의장은 이강래 원내대표의 직권상정에 대한 입장표명 요구에 "15일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것 이외에는 안하겠다"고 밝히고 "그런 점은 의장을 믿고 재차 질문하고 답변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처럼 쟁점법안 문제에 대한 여야의 협상이 한 치의 진전도 없는 가운데, 천성관 검찰총장 내정자에 대한 공방까지 달아오르면서 정국은 시계제로의 혼란 속으로 빠져드는 양상이다.

우선 한나라당이 미디어법 상임위 논의의 데드라인으로 설정한 15일이 다가오면서 이날 본회의장에서의 물리적 충돌도 배제할 수 없다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한나라당이 15일 본회의에서의 여야 합의법안을 처리한 이후 본회의장을 점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를 적극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서는 김형오 국회의장이 금주내 쟁점법안 논의를 마쳐달라고 주문한 이상 이번주 내에 직권상정 가능성은 없지만, 다음주 직권상정을 둘러싼 여야 간의 충돌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한나라당 안상수, 민주당 이강래, 선진과 창조의 모임 문국현 원내대표는 여의도 모 음식점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협의했으나 합의점 도출에 실패했다.

안 원내대표는 회동에서 민주당의 4주간 새 임시회 소집 요구에 대해 국회 무력화 및 미디어법 처리 지연을 위한 정략적인 제안에 불과하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민주, 대통합 시도 본격화

정대표 '시민사회 원탁회의' 참가… '野 선거연대' 권유 받기도

민주당이 대통합 작업에 시동을 걸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권 안팎의 다양한 인사들이 참여하는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소통을 위한 원탁회의'에 참가했다.

이날 회의에서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는 정 대표를 비롯해 민주노동당 강기갑, 창조한국당 문국현,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 등 야당 대표들에게 선거연대를 권유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이명박 정부에게 국민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선 선거연대를 통해 힘을 모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취지였다.

회의에선 또 민주세력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조속히 논의를 시작하라는 내용의 권유도 있었다. 이는 앞서 정 대표가 제시했던 민주대통합론과 일맥상통하는 이야기다.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49재 이후 대통합 논의가 활발해질 것이란 관측은 있었지만 이처럼 시민사회까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다. 하지만, 최근 여권에서 충청연합론을 계속 제기하며 보수층의 결집을 시도하면서 진보진영에 위기감이 작용, 대통합론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참석자는 "정권 독주를 막기 위해 연합하는 것은 국민이 이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소수야당 대표들은 분명한 찬성입장을 밝히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중심의 대통합론이 급진전할 경우 소수 야당의 존재감이 상실될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정국 주요현안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면서 향후 대통합 성사 가능성을 밝게 했다.

이들은 회의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여권이 추진하는 언론관계법을 'MB악법'으로 규정한 뒤 "직권상정 등으로 강행통과될 경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비정규직법에 대해서도 "별도의 유예기간을 두기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폭넓은 대책을 준비해 문제를 전향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결론이 도출된 것은 아니지만, 야권이 모두 참여하는 원탁회의에서 자연스럽게 대통합 문제가 거론된 만큼 향후 대통합 논의에도 가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일 잘하고 신뢰 받아야 후보 가능"

■ 취임 1년 김동철 민주 시당위원장

취임 1주년을 맞은 민주당 김동철 광주시당 위원장은 14일 "내년 지방선거는 민주주의와 서민경제, 남북관계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이명박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라면서 "민주당이 국민과 더불어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유능하고 역량 있는 인재를 발굴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 원칙과 관행을 반드시 정착시키겠다"고 다짐했다.

-내년 지방선거 후보 공천 기본 입장은.

▲4·29 재보궐 선거 용역 결과, 시민들은 민주당이 더 진보적이길 바라고 있다. 민의를 받아들여 더욱 진보적인 정책과 주장을 내놓겠다. 민주당은 과거 공천이나 선거과정에서 불투명한 사례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 따라서 내년 지방선거 공천과정에서 자질과 능력, 도덕성에 더 무게를 두고 당 기여도 등을 고려하겠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현역 프리미엄을 견제할 방안은.

▲다각적인 방법을 고민 중이다. 공천심사위원회를 외부에 개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외부인사를 전부 또는 과반, 3분의 1 이상 참여시켜 투명하게 할 생각이다. 또 현역 단체장이나 의원을 일률적으로 30% 또는 50% 물갈이 하겠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 공천기준 통해 현역 프리미엄을 줄이되 현역이 부당하게 우대받는 공천은 않겠다.

-광주지역 한 국회의원의 '제3후보론'과 '물갈이론'에 대해.

▲해당 의원의 개인적인 소신일 뿐 광주시당 차원에서 논의된 것은 없다. 중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할 시당 위원장이 시장선거 공천에 대해 가타부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옛 전남도청 별관문제와 관련해 10인 대책위원회의 활동 마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

▲'오월의 문', '3분의 1 존치' 2가지 안을 가지고 문광부와 교섭 중이다. 둘 중 하나가 관철되도록 노력하겠다. 교섭 결과를 15일 발표할 예정이지만 문광부의 사정으로 하루 이틀 늦어질 수도 있겠다.

-10인 대책위의 2가지 안에 대해 문광부는 부정적인데.

▲아직 문광부 입장이 나오지 않았다. 시장과 시의장, 국회의원이 참여하고 있는 10인 대책위를 무시하지는 않을 것이다.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10인 대책위의 활동이 명분쌓기용에 불과했다는 비판도 있는데.

▲시민단체가 내놓은 안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비쳐지지만 10인 대책위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현실적이고 최선의 안을 선택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정가 라운지

한나라 시·도당위원장 누가 될까

○…한나라당 광주시·전남도당 위원장 선거가 29일과 28일로 예정된 가운데 시·도당 위원장이 누가 될지 관심이다. 특히 이번에 선출되는 시·도당 위원장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치러야 하는 야전 사령관의 책무를 맡을 뿐만 아니라 9월 개최설이 흘러나오고 있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역 계파구도 형성을 놓고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광주시당 위원장은 '현역 프리미엄'이 있는 김태욱 위원장의 재선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노영복 남구 당협위원장과 김광만 전국위원이 자천타천으로 거명되고 있다.

전남도당 위원장 역시 이재오 전 의원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김기룡 위원장의 출마가 기정사실로 돼있는 가운데 친 정몽준 계열의 김문일 담양·곡성·구례 당협위원장의 도전 여부가 주목된다.

김성순 "서남권에 황해특별시 건설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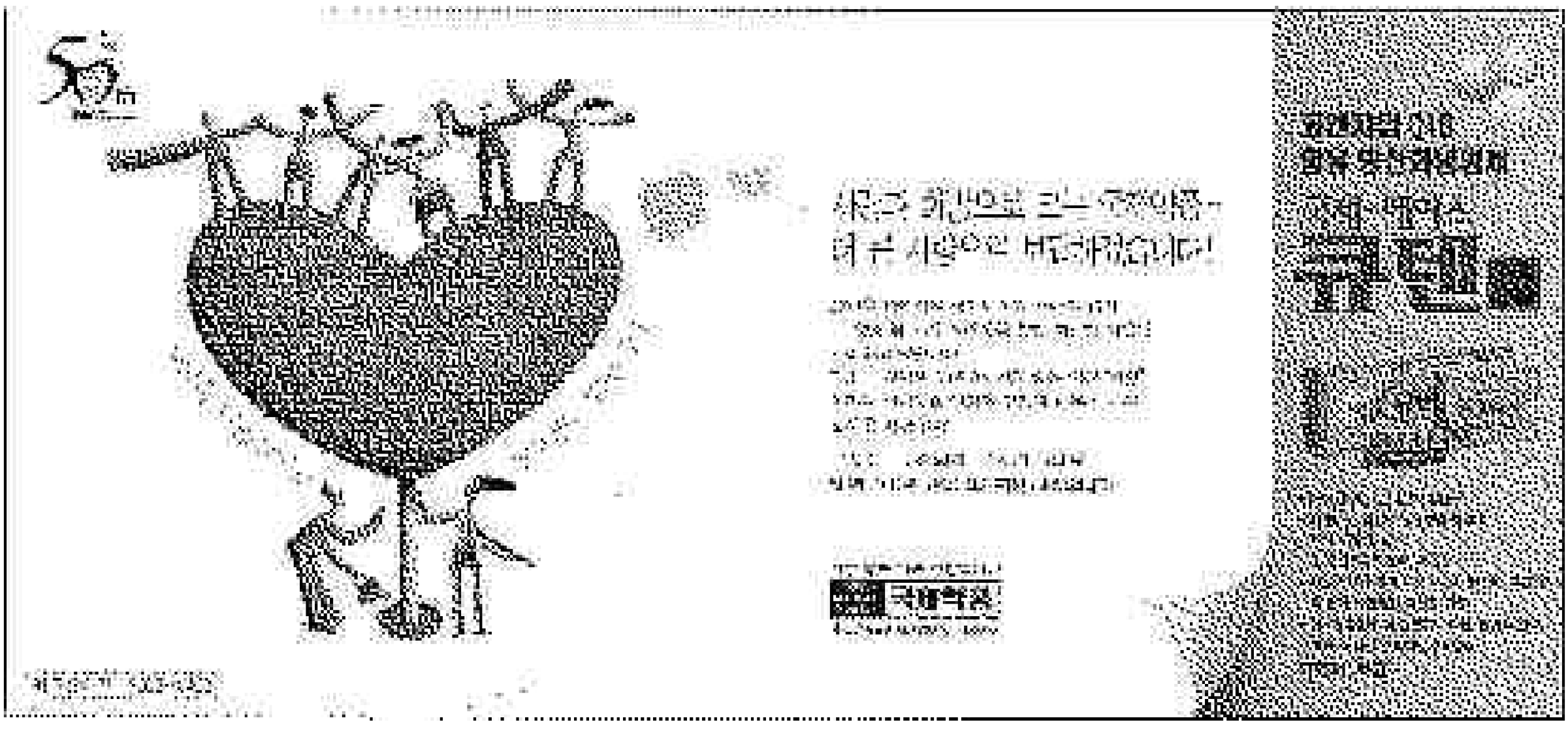
○…민주당 김성순 의원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앞으로 10여년이 지나면 환황해권이 세계경제의 중심, 세계 최대의 산업지대가 되어 세계물류의 핵이 될 것"이라며 "서해안 서남권에 '황해항 테크노폴리스'를 건설해야 한다"고 제안해 눈길을 모았다.

김 의원이 구상하는 황해특별시는 무안·신안·함평·영광군 일대에 걸친 636㎢ 규모의 국제항만 혁신산업클러스터 도시.

무안군 해제·현경면, 영광군 염산면, 함평군 손불면, 신안군 임자면 일대 416㎢에 연안 간석지 220㎢를 매립해서 ▲250㎢의 항만물류 산업단지 ▲50㎢의 국제업무 중심도시 ▲50㎢ 규모의 산업지역 배후도시 ▲기타 기존 취락 및 농림 녹지 등으로 구성된 청정 산업도시를 만들자는 것으로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도 제안한 바 있다.

광산구의회 '신창동 승마장' 반대

○…광주 광산구의회는 14일 제161회 정례회에서 '광산구 신창동 영산강 대상근린공원 내 승마장 조성 반대 건의문'을 채택했다.

광산구의회는 "도심내 승마장은 말분뇨에 의한 악취, 미세먼지, 토양 및 수질오염 등으로 인해 승마장과 주변 주민간 분쟁이 예상된다"며 영산강근린공원 내 승마장 조성 계획을 철회해 줄 것을 환경부와 광주시에 건의했다. 건의안을 제안한 최경미 의원(민노·다선거구)은 "승마장 시설이 들어오면 도심에 자리한 보기드문 습지인 영산강유역의 수질을 크게 오염시킬 뿐만아니라 인근에 다수의 교육시설과 아파트 밀집지역이 있어 주민 민원 제기가 불을 보듯 뻔하다"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승마장 조성 반대 투쟁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지경·박정욱기자 jwpark@
/광산=기원태기자 wtkee@kwangju.co.kr